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
	배포일시	2017. 12. 27(수) / 총 3매	
담당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과장 주종완, 사무관 전 진, 주무관 조만기 •☎ (044) 201-4138, 4139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및 범도민행동 기자회견 관련 국토부 입장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그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**지역 의견 수렴 내용과 예산집행 측면** 등을 토대로,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**사전타당성 조사**(‘15.11)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**여러 의혹을 해소**하기 위해 ‘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’(이하 “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”) **발주 절차를 진행** 중에 있습니다.

- 그러나 위 용역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 주민들이 **기자회견**(12.26)을 통해 **문제를 제기**하고 있는 바, 이와 관련하여 **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밝힙니다.**
 - ①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‘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제주 제2공항 추진’은 **사실과 다릅니다.**

 - 제주도의 건의에 따라 ‘13년부터 제주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‘제주항공수요조사’(‘13~‘14), ‘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’(‘14~‘15), ‘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사업 예비타당성 조사’(‘16) 등 **수년간 수차례** 조사를 한 바 있으며, 그 과정에서 **지역 설명회**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. 다만 **최종 입지**는 부동산 투기 등 문제로 **사전에 공개**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

○ 또한, 발주 중인 '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'은 과거 '사전타당성 조사'의 중대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 한 뒤, 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계획 고시를 하기 위한 연구단계로, 연구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기본계획과 관련한 법정절차는 연구종료 이후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에서 시작

② 아울러, '타당성 재조사'의 결과 처리는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주민들과 함께 구성하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연구과정을 모니터링 하며 주민추천 자문위원의 참여도 보장하여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○ 또한, '타당성 재조사'의 공정성·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, 항공정책위원회가 전문기관 연구 결과와 검토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여 심의·의결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.

○ 제주도민 500명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 향후 국책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속 협의 예정입니다.

③ 또한, '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항공수요 관리 필요성'도 국책사업 추진 중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.

○ 환경과 안전, 국민의 삶의 질 보장 등은 국책사업에서 우선시 되는 가치이며, 이러한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○ 아울러, 현 제주공항은 항공여객 증가로 활주로 포화, 관제 처리 용량 한계 등으로 금년 추석연휴(9.29) 제주공항 항공기 충돌위기 발생 등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항공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어, 정부의 책임인 국민 안전과 공항이용 편의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.

□ 향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며 관련 법·제도하에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.

< 반대위 및 도민행동 기자회견 내용 (12.26) >

◆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

- 국토부가 형식적으로만 재조사를 수용했을 뿐 결과와 후속조치는 국토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구조
- 환경수용력을 먼저 설정한 다음 항공수요관리를 적절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타당성 재조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
- 국토부는 일방행정을 강행, 즉각 기본계획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전 진사무관(☎ 044-201-41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